

## 강원도

### ▶ 강원대, 아시아 최초 자동화 복지 양계시설 마련



강원대학교는 지난 4월 25일 강원대학교 동물사육장에서 '복지 양계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복지 양계사는 아시아 최초의 자동화 복지 양계사로 278㎡의 면적에 약 1,000수(성계 기준)를 사육할 수 있는 개방형 케이지 형태로 신축되었으며, ▲육성시스템 1조 ▲산란시스템 1조 ▲계분처리장 1실 ▲집란장 1실 ▲방사장 2실 ▲계군 감시 및 경보시설 ▲약품 급이기 ▲식품 급이기 등의 각종 첨단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육성사와 성계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관리되어 질병의 교차감염을 차단할 수 있게 했으며, 산란계의 운동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층간 계단을 설치하여 이동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계사내 모든 시설의 자동화를 비롯 방사장 설치를 통한 산란계의 복지수준을 극대화시켰으며, LED 설치로 난상 외 지역에서의 산란을 최소화 시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란벨트에 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게 하였고 계분벨트를 설치하여 계사의 위생성

향상 및 계란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동물생명과학대학 박춘근 학장은 "이번 우리 대학의 아시아 최초 자동화 복지 양계사 준공으로 앞으로 국내 가축복지분야 연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 평창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평창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오염예방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창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까지 허가대상 시설 128개소 및 신고대상시설 128개소 등 돼지, 소, 말, 양, 닭 등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25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이번 기간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증설하거나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배출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젖소의 착유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세정수의 처리실태, 액비 저장조의 관리·운영실태,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와 함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평창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나 고질적인 위반업소 및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 ▶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충남도가 지난 4월 3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제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데 이어 지난 4월 15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도내에선 지난해 12월 29일 천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시가 발생한 이후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후 107일 만에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도내 고병원성 시 발생 건수는 모두 6건(천안 5건, 아산 1건)으로, 이로 인해 13농가의 가금류 21만 7000마리가 살처분돼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3월 5일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시가 판정됐으며,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혈청 및 임상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내 이동제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자유로운 출하는 물론, 가금류의 재입식도 가능하게 됐다.

박영진 도 축산과장은 "아직도 경기도와 경북의 일부지역은 최근까지 시가 발생해 가축 이동제한 중에 있어 충남도도 차단 방역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

### ▶▶ 영동, 가축제한 조례 앞두고 '끝물' 극심

영동군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축사를 서둘러 지으려는 농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축사

조성을 끝내고픈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20일 현재까지 축사 신축 신고가 1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위축 분위기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증가 추세"며 "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일단 조례 적용을 받기 전에 축사를 확보해놓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축사와 관련한 집단민원도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양강면 유점리 주민들이 마을 앞에 들어서려는 닭 사육시설에 반발해 건립이 중단되자 땅 주인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중이다.

4월 초에는 황간면 우매리 주민들이 마을 뒤편에 대규모 돼지 사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서명을 받아 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악취, 해충 발생,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축사 관련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은 지난 3월 15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과는 200m 이내에서는 축사건축이 불가능하고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은 500m 이상 떨어져도록 했다.

또 상수도 취·정수시설로부터 100m 이내, 하천 경계선으로부터는 50m 이내도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와 군의회 의결, 총복도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커 집단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간 마찰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 ▶▶ 미국산 냉동닭이 국산 순살로 둔갑

미국산 냉동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부산의 한 축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뼈를 추려낸 다음에 납품했는데 치킨전문점에 닭강정으로 팔려나갔다.

이 업체는 미국과 브라질산 수입 냉동닭다리를 해동하여 뼈만 추려낸 뒤 살점만 발라 정육상태로 식품회사에 납품했다.

납품업체에는 국내산 닭이라고 속였고 kg당 원가는 3배 가량 뛰었다.

이렇게 납품된 닭고기는 한 유명 치킨 전문점으로 유통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닭강정같은 뼈 없는 메뉴로 팔렸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닭 11톤을 전국의 식품가공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 김씨를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김씨가 하청업체와 짜고 부가세 신고를 미리해 놓는 등 지능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가공업체들을 상대로 정육제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

### ▶▶ 가축 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변경

경상북도는 전염병으로 가축을 매몰할 때 액체 비료 저장조를 활용하거나 미생물을 섞는 등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소와 돼지를 매몰할 때 액체 비료 저장조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축분뇨를 넣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왕겨와 쌀겨, 호기성 미생물과 함께 매몰하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광주광역시

### ▶▶ 구제역 및 AI 청정지역 지킴이 선포 및 결의대회 개최

광주시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 ‘청정지역 지킴이 선포 및 결의대회’를 갖고 친환경 명품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청석공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역동 광주시장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 지속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고 시민이 더욱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행사로써는 청정지역 지킴이 선포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써는 구제역 청정 광주한우 맛체험, 조류인플루엔자를 이겨낸 닭이 아침에 낳은 계란 맛체험, 자연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구 축산농협 주관의 '가축도 행복한 광주시 동물' 전시전과 광주시 우리꽃 연구회의 '우리꽃 전시회'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북도

### ▶ 남원,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고기, 계란 판매 금지

전라북도 남원시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9개소, 식육판매업 150개소, 식육부산물판매업 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개소 중 2년차 영업자가 교육대상이며 소집교육과 원격교육(인터넷교육) 중 택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0년 11월 26일자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종전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뿐만 아니라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식육점 및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돼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없이 유통·판매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도 지난 4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됐고, 축산물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

매업' 세부영업을 신설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먹거리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해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영업자의 해당사항 준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형태 변화가 최선의 길"이라며 시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적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축산당국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당국은 축산업 등록을 대상을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등록대상 가축종류를 소·돼지·닭·오리에서 모든 우제류 및 가금류를 포함하고, 등록대상 농가도 가축종류별 50~300㎡ 초과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조덕준 축정과정은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농가와 유관기관 및 도민들께 감사한다”면서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 강화

봄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농장 내 가축질병 치료 및 사양관리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내 도축장 및 도계장의 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잔류위반농가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가축에 대해서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3회 연속 음성 판정시에 잔류위반 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 출하가축에 대하여 무작위로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 의심축의 시료를 채취하여 1차 검사로 항생제 잔류유무 판정을 하고 양성 판정시 2차로 정밀기기 분석을 통하여 항생물질 종류 및 기준치 초과여부 등의 정밀 확인 검사에 들어간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2008년 8,052건,

2009년 12,985건, 2010년 14,389건, 금년 3월 25일 현재 2,300건으로 해마다 검사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결과는 2009년 12농가 27건, 2010년 5농가 8건, 금년도는 지금까지 잔류위반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밝혔다.

▶▶ 한·육우 사육두수 늘고 돼지, 닭은 줄어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2011년 1/4분기 가축사육마리수는 구제역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한·육우는 증가한 반면, 사료가격 상승과 소비감소로 젓소, 돼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 발생으로 인해 닭도 감소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3만두로 3개월전보다 0.1% 감소한 반면 1년전보다 6.5%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 제한으로 외부유출 금지 및 축산시장 폐쇄로 생우 출하감소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젓소 사육마리수는 5천두로 3개월전보다 0.2% 증가했지만 1년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돼지 사육마리수는 48만8천두로 3개월전보다 2.8%, 1년전보다 3.5% 감소했다.

닭은 90만6천수로 조사돼 3개월전보다 32.6%, 1년전보다 39.5% 줄었다.

감소원인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이 불가능해 임시휴업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